

# 도 인성교육 정책 수립 시행 제도적 근거 마련

이명연 도의원 대표 발의 조례안, 행사위 심의 통과

인성교육 정책을 체계적으로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가 마련됐다

전북도의회 이명연 의원(환경복지위원장 전주11)이 대표 발의한 '전북도 인성교육 지원 조례안'이 행정자치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고 25일 밝혔다

이 의원은 "인성교육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수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건전한 교양을 갖춘 인성을 갖춘 도민을 육성, 국가와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발의하게 됐



다"고 설명했다.

조례안에는 인성교육 관련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정책을 수립, 시행할 수 있도록 ▲인간다운 성품과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교육 사업과 인성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인성교육 교재 및 영상자료 등 교육자료 개발 ▲인성교육 전문인력 양성 ▲인성교육의 홍보 등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했다.

또한 인성교육은 도민이나 전북도에 소재한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제공함을 원칙으로 하며, 사업에 지장이 없는 한 그 외의 자에게도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전문성을 갖춘 법인 및 단체에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도록 했고, 전북도교육청 등 인성교육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으며, 도지사는 인성교육 및 프로그램 개발 등에 적극적으로 협력하는 공무원 개인·단체 등에 포상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유호상 기자

# “무릎 꿇고서라도 용서 구하겠다”

갑질 논란 송지용 도의장

당사자 지목 전북도 2급

공무원 등 향해 고개 숙여



그러면서 “사무처장과 일하는 과정에서 생각의 차이가 있었고, 그런 데서 오는 이견이 있었던 같다”면서 “앞으로 상대방 입장에서 일하는 토양을 만들어 가겠다”고 약속했다.

또 “개인적인 감정은 없었지만, 상처를 받았다면 사과를 한다”면서 “오는 월요일 사무처장을 직접 찾아가 무릎을 꿇고서라도 용서를 구하겠다. 16년간 의정활동을 하면서 나도 모르게 상처를 준 공직자들에게도 용서를 구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전북도의회와 전북도공무원노조 등에 따르면 송 의장은 최근 의정실에서 도의회 사무처장 A씨를 상대로 의전 등을 문제 삼아 폭언 등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직원 장례식장에서 일어난 의전 문제 등에 대해 송 의장이 사무처장에게 욕설과 함께 질책했다고 전해진다.

당사자인 사무처장 A씨는 이 내용을 지난 19일 도 인권담당관실에 조사신청을 접수했고, 25일에는 휴가를 내고 출근을 하지 않는 등 사퇴가 커졌다. 도는 접수된 내용을 25일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상담센터로 이송했다. /뉴스

# ‘전주서도 스타트업 자신감 준 좋은 본보기’

우범기 전 정부부지사

‘육육걸즈’ 찾아 애로 청취

“돈 쓸 곳 많은 전주 거둬야”



우범기 전 전북도 정부부지사가 전주 기업 릴레이 탐방 세 번째 일정을 가졌다. 우 전 부지사는 25일 온라인 쇼핑몰 업계의 대표주자로 자리매김한 ‘육육걸즈’를 방문했다.

우범기 전 전북도 정부부지사가 ‘전주 기업 릴레이 탐방’ 세 번째 일정을 가졌다

우 전 부지사는 25일 온라인 쇼핑몰 업계의 대표주자로 자리매김한 ‘육육걸즈’를 방문했다.

전주시 삼천동에 위치한 ‘육육걸즈’는 중학교 3학년 때 온라인 쇼핑몰 업계로 뛰어들어 현재 30세가 된 박예나 대표가 다양한 디자인과 높은 퀄리티의 상품을 고집하며, 현재 연 매출액 500~600여 만에 달하는 쇼핑몰로 급성장했다.

박 대표는 “업종 상 젊은 청년을 위한 도시 인프라가 많이 필요하다”면서 “복지정책에 충분히 신경을 쓰고 있는 데도, 지방이기는 한데 때문에 정착하지 않고 전주를 떠나는 현실이 안타깝다”고 토로했다.

이에, 우 전 부지사는 “육육걸즈가 젊은 청년들이 전주에서도 스타트업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준 좋은 본보기가 되고 있다”고 격려했다.

그러면서, “젊은 청년들이 떠나지 않고 전주를 만들기 위해서는 정주여건 마련이 중요하다. 청년 정주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해 결혼·출산으로 이어져야 한다”며 “그러기 위해서는 늘

거리·불거리 등 돈 쓸 곳이 많은 전주로 거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 전 부지사는 또, “떠났다 허덕여도 다시 돌아오고 싶은 ‘회귀 전주’가 되게 하려면 주거문제는 물론 일자리 문제가 해결돼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유호상 기자

전주시의회 행정위, 전북

중기연수원 건립 부지 방문

전주시의회 행정위원회(위원장 김은영)가 25일 전북 중소기업연수원 조성 현장에 대한 점검을 나섰다

이날 김은영 위원장을 비롯한 행정위원회 위원들은 대성동 일원에 조성될 전북 중소기업 연수원 부지를 방문해 관련 부서로부터 추진 현황에 대한 설명을 듣고, 사업의 효과성과 적정성 등을 논의했다.

전북 중소기업연수원은 산업의 인력 수요 증가에 따라 중소기업 인력 양성을 지원하고, 고용·산업 활성화를 위한 제조업의 육성 등 중소기업 지원기관의 집적지로서의 역할을 할 예정이다.

김 위원장은 “이번 현장 점검에서 지적한 의원님들의 당부사항을 적극 반영하여 시민들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만전에 기해달라”며 “앞으로도 시민들의 일상생활과 밀접하고, 시민들의 복지증진과 관련된 사항들은 면밀히 검토하여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펼쳐달라”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최찬욱 도의원, 문인협회 공로패

전북도의회 최찬욱 의원(전주10·더불어민주당)이 25일 전북문인협회(회장 김경)로부터 공로패를 받았다.

최 의원은 이날 전주 아름다운전반 선위당에서 열린 전북문협 창립 60주년 기념 문학자에서 평소 예향 전북의 문화적 토대를 마련하고, 전북문인협회의 발전을 위해 예산 지원 등의 노력을 인정받아 이번 공로패를 수상했다. /유호상 기자

# “한국판 뉴딜, 균형발전이 성공 열쇠”

민중 김수홍 의원  
균형발전특위 위원에



만드는 일”이라며 “대한민국의 한 단계 더 높은 도약을 위해 추진하는 한국판 뉴딜 사업도 균형발전이 성공 열쇠”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수홍 국회의원(전북 익산갑, 기획재정위원회)이 더불어민주당 국가균형발전특별위원회(이하 균특위) 위원으로 임명됐다.

김 의원은 이날 2일 부로 더불어민주당 중앙 내 특위로 구성된 국가균형발전특별위원회 소속 위원으로 임명돼 특위 활동을 시작했다.

지난 9월 30일 공식 출범한 더불어민주당 균특위는 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위원장을 역임한 송재호 의원이 위원장을 맡아 정부의 균형발전 정책 수립 및 공공기관 2차 이전 계획을 수립을 위해 활동하고 있다.

김 의원은 “국토를 균형있게 이용하는 것이 문재인 정부의 5대 목표 가운데 하나인 ‘고르게 발전하는 나라’를

해 한국판 뉴딜 사업 추진 목표에 지역균형발전을 담아내는 데 성공했으며, 국정감사를 통해서도 수도권 일변도의 정부 정책 방향을 지역으로 이끌어 내는 데 심혈을 기울인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김 의원은 “소멸 위험에 직면해 있는 지방을 살리지 않으면 결과적으로 수도권 역시 공멸할 것”이라며 “균특위 활동을 통해 2차 공공기관의 효율적인 지역 배치 및 균형발전 정책 반영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유호상 기자

# 새만금개발청, 영어권 기업 대상 웨비나 개최

새만금개발청(청장 양충모)은 25일 2021 영어권 기업 대상 웨비나를 개최해 새만금의 다양한 사업 기회를 소개하고 투자를 요청했다.

이 행사는 신한은행과 에이온(AON)사가 공동으로 주최하고, 미주·유럽 권역의 신재생에너지·자동차·철단 소재 분야 약 30개 기업이 참석했다.

웨비나에서는 코로나가 한국의 전반적인 투자 환경을 소개하고, 신한은행의 외국기업의 정착을 위한 외부가 설립절차 안내와 함께 에이온사가 외

국기업의 한국 투자 시 위험관리 방법 등을 소개했다.

새만금개발청은 세계 최대 규모로 추진 중인 새만금 재생에너지 사업과 미래형 자동차를 비롯한 신산업 클러스터(협력지구) 조성, 다양한 투자혜택 등 매력적인 투자환경을 설명했다.

기업들은 스마트그린 산단 구축을 통해 RE100 기반을 마련하고, 디지털·그린에너지와 관련한 미래 신산업 클러스터 구축 전략에 높은 관심을 보였다. /유호상 기자

# 도의회 상임위 예산 심사

# “청년·신증년에게 인센티브 주는 방향 검토”

농산경위, 전북형 취업 지원사업 관련

전북도의회 농산경계위원회(위원장 김철수)는 25일 제386회 정례회 기간 전북도 일자리경제본부에 대해 2021년 제3회 추경예산안 및 2022년 본예산 심사를 실시했다.

농산경계위원회 김철수 위원장을 비롯한 소속 의원들은 심사과정에서 사업 필요성 및 타당성 등을 꼼꼼히 분석해 예산 낭비·요인 등에

대해 질의했다.

정호윤 의원(전주1)은 전북도명장 조례에 따른 명장 선정·지원과 관련해 심사위원회는 어떠한 방식으로 구성되는지 여부에 대해 질의하며, 신규사업인 만큼 선정에 있어 공정성 및 신뢰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 마련을 당부했다.

나인권 의원(김제2)은 전북형 청년취업 지원사업 및 신증년 취업지

원사업과 관련해 “기업에 대해 간접적으로 인센티브를 주지 말고, 일자리를 원하는 청년이나 신증년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방향도 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두세훈 의원(완주2)은 “대학생 공공 직무인턴 운영사업과 관련해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지적했지만, 전북도청 내에서도 모범을 보여서 공직생활에 대해 청년에게 기회를 제공하는 부분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주길 주문했다.

# “긴급 출동 시 골든타임 줄이기 위해 노력해야”

행자위 “상황 훈련 강화방안 찾아야”

전북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문승우)는 25일 제386회 정례회 제3차 회의를 개최, 소방본부 소관 등 2022년도 예산안 및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했다.

성경찬 의원(고창)은 “시민안전 사고 예방활동에 대한 필요성에 비해 이번엔 편성한 예산 규모가 작아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며 “소

방행기 등 신규장비 구입 시 기존 사용장비에 대한 활용방안을 마련해 소방 재원이 낭비되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용근 의원(장수)은 “최근 도입을 앞두고 있는 70미터 고가터리차와 소방헬기 구입 전 장비 실물과 운영 현장을 방문했는데, 실제로 전북도에 도입 시 활용방안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했다”고 지적하

며 “상황 훈련에 대한 강화방안을 마련해 긴급 출동 시 골든타임을 줄이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문승우 위원장(군산4)은 “현재 미니 전기차를 활용해 소방 순찰 및 예방 활동을 하고 있는데, 늘 소방이 함께하고 있다는 인식을 심어주고, 도민들에게 안정감을 줄 수 있도록 전북도 전역에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 “임대주택 위치 결정, 교육여건 좋은 곳에”

문건위, 전북형 청년 임대주택 관련

전북도의회 문화건설안전위원회(위원장 이정민)는 25일 건설교통국 소관 2021년도 3회 추가경정예산안, 2022년도 본예산에 대해 심사했다.

최찬욱 의원(전주10)은 전북형 청년 임대주택사업에 대해 “청년인구 유입을 위해서는 단순 건축물인 주택보다는 정주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주는 주거의 개념으로 접근

해야 한다”며 “임대주택의 위치를 결정할 때 청년들의 일자리와 가깝고, 교육여건이 좋은 곳에 조성하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영규 의원(익산4)은 “전북도 공공시설물의 표준디자인을 개발을 위한 표준디자인 개발용역과 지역 특성에 맞는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구축을 위한 유니버설디자인 가

이드라인 수립 신규용역의 성격이 유사해 중복의 소지가 보인다”고 지적하며, 사업 재검토를 촉구했다.

이정민 위원장(남원1)은 겨울철 도로 제설에 쓰이는 염화칼슘의 전국적인 부족 현상에 대해 언급하며, “올 겨울 기상예보를 미리 확인해 재난안전 필수 자재를 시군별로 문 제없이 수급할 수 있도록 도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지원 해주길 당부했다.

“농민수당과 통합 시스템 만들어야”

한복위, 새만금해양수산국 예산 심사

전북도의회 환경복지위원회(위원장 이명연)가 25일 새만금해양수산국 2021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 2022년 예산심사에 돌입했다.

황영식 의원(김제)은 “수산업·어촌 공익수당 지급 2021년 사업대상이 4,982여기로 집행액을 기준으로 지원된 어가의 수가 1,989여기인 것과 상당한 차이가 있다”고 지적하며 “사업 시 전 타당한 수요조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할 것과 농민수당과 통합적인 시스템을 만들어 수당지급이 차질없도록 추진할 것”을 당부했다.

김만기 의원(고창)은 “새만금과 인근 3개 시·군 펌 부어 사업이 지난 2015년부터 시작됐는데, 관련 취지에 맞는 사업자를 선정해 사업을 추진하고, 새만금 홍보와 함께 인근 군산, 김제, 부안 3개 시·군 분 아니라, 도내 다른 시·군 홍보도 같이 할 수 있는 방안도 고려할 것”을 주문했다.

“안전성 검증 예산 포함돼야”

교육위, 교육청 산하기관 예산 심사

전북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김희수)가 25일 전북도 교육청의 6개 원과 6개 관의 2021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2년도 본예산안을 심의했다.

최영일 의원(순창)은 “교원수첩 발간은 큰 틀은 변하지 않음 텐데도 불구하고, 검토에 이어, 감사 과정을 거치는 것은 과도한 예산 편성”이라고 지적했다.

김희수 위원장(전주6)은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강압 감사 논란이 있었던 곳이 분관이였다”며 “이런 사안이 반복되지 않도록 분관이 있는 교육문화회관 장남들은 분관과 같은 관심을 두고, 관리·감독해달라”고 당부했다. /유호상 기자